

아일랜드 경제의 회복방향과 시사점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김준엽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junyupkim@kiep.go.kr, Tel: 3460-1064)

차 례 ●●●

1. 저점을 통과한 아일랜드 경제
2. 아일랜드 경제의 개선요인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재정위기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일랜드 경제는 여러 경제지표에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2년에 아일랜드 경제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0.4%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는데, 경상 · 무역수지 흑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도 2012년 중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함.
 - 재정위기국 중 아일랜드의 경제 개선속도가 빠른 이유는 재정위기의 원인이 여타 남유럽 국가와 다르고, 아일랜드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정부의 개혁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판단됨.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① 재정건전성 강화, ② 민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③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였음.
 -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 대비 3%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긴축을 추진해 왔으며, 감축목표에 실패한 남유럽 국가와 달리 목표치를 달성해 왔음.
 - 민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특수기관(NAMA)이 설립되어 2011년 말까지 총 740억 유로의 부실채권 매입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추진되었음.
 -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은 2008년부터 감소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1만 3,000여 개의 FDI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 ▶ 당분간 아일랜드 경제는 긴축과 높은 실업률에 따른 내수침체 속에서도 수출증가가 경기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존의 경기침체와 부실은행 문제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높은 수출비중은 긴축에 따른 경기하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던 배경인바, 앞으로도 수출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아일랜드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건전화와 부실은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함.
 - 경제위기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은 외자유치, 수출주도 성장을 이룬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원에 있으며, 대외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1. 저점을 통과한 아일랜드 경제

■ 재정위기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일랜드 경제는 여러 경제지표에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아일랜드 경제는 2012년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12년 유로존의 경기침체(-0.5%)에도 불구하고 0.6%의 성장을 기록함.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아일랜드는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경기침체가 시작됐으나 2010년 11월 IMF와 유로존의 구제금융 이후 2011년 1/4분기부터 경기반등을 보인 바 있음.
- 재정위기의 여파로 재정위기국이 2012년 중 -5.8~-1.3%의 경기침체를 보인 데 반해 아일랜드는 경기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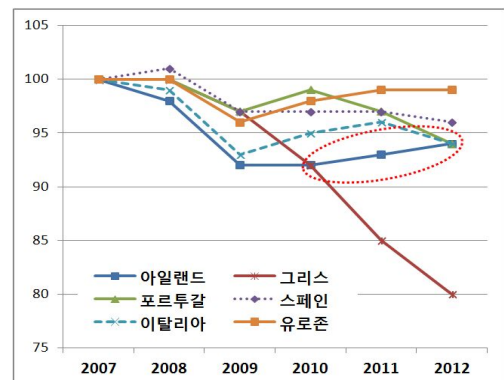
표 1. 유로존 재정위국국의 GDP 성장률

(단위: %)

	' 07	' 08	' 09	' 10	' 11	' 12			
						1q	2q	3q	연간
아일랜드	5.4	-2.1	-5.5	-0.8	1.4	1.7	0.1	0.8	0.6
그리스	3.6	-0.2	-3.2	-4.9	-7.2	-6.7	-6.3	-6.9	-5.8
포르투갈	2.4	0.0	-2.9	1.9	-1.6	-2.3	-3.1	-3.5	-3.1
스페인	3.5	0.9	-3.7	-0.3	0.4	-0.7	-1.4	-1.6	-1.3
이탈리아	1.5	-1.2	-5.5	1.8	0.6	-1.3	-2.3	-2.4	-2.1
유로존	3.0	0.3	-4.3	1.9	1.5	-0.1	-0.5	-0.6	-0.5

주: 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자료: Oxford Economics, GDP real.

그림 1. GDP 변화추이(200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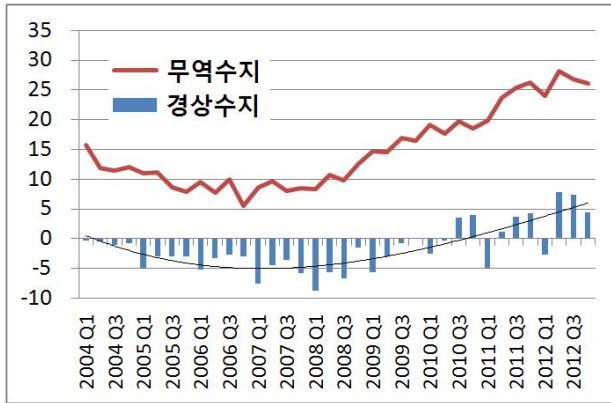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GDP real.

-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여러 경제지표들은 아일랜드 경제가 경제위기의 저점을 벗어났음을 시사하고 있음.
 - 임금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경상수지는 2004~09년 중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부터 플러스로 전환, 이후 흑자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2007년 GDP 대비 8.7%에서 2012년 25%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그림 2 참고).
 - 실업률은 여전히 높으나 2012년 중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계속 증가 중인 그리스나 스페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그림 3 참고).
- 특히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임금수준이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하락도 종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은 2007년 3/4분기~2012년 1/4분기 동안 16% 감소하였으나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4 참고), 부동산 가격도 최고점(2007년 3/4분기) 대비 50%의 하락을 기록한 후 최근 안정 기미를 보이기 시작함(그림 5 참고).

그림 2. 아일랜드의 무역 및 경상수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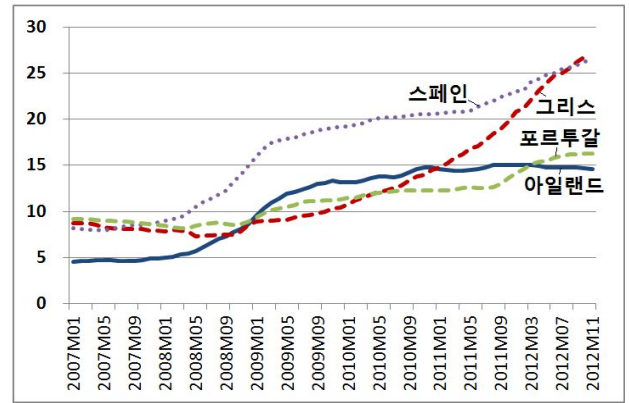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xford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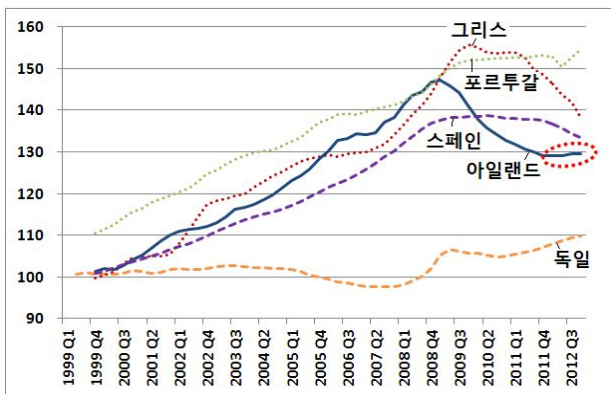
그림 3. 실업률 변화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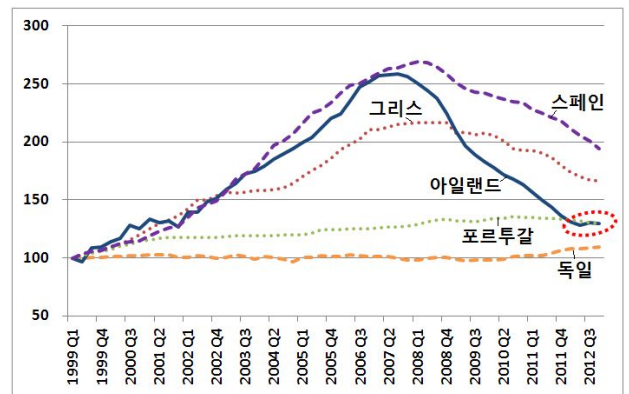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4. 단위노동비용 변화
(1999년 1/4분기 = 100)



주: 1999년 1/4분기~2012년 3/4분기까지의 자료
자료: Oxford Economics, Housing price index.

그림 5. 부동산 가격 변화
(1999년 1/4분기 = 100)



주: 1999년 1/4분기~2012년 3/4분기까지의 자료이며, 4분기 이동평균으로 표시
자료: Oxford Economics, Unit wage costs, whole economy, nominal.

■ 재정위기국 중 아일랜드의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는 ① 경제위기의 성격과 ② 아일랜드 경제의 구조적 특징, ③ 아일랜드 정부의 개혁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아일랜드의 경제위기는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한 위기라기보다는 금융권 부실화와 이에 따른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는 성격이 다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권이 급속히 부실화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예금보호조치와 부실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된 바 있음.
 - 금융부실화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경기침체가 유로존 평균에 비해 3분기 일찍 시작되었으며, 침체의 폭도 더 컸음.
- 재정위기국이 대체로 내수위주 경제로 막대한 경상·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반해 아일랜드는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임.
 - 유로존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아일랜드의 수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함.

- IMF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하여 신용평가기관들은 아일랜드를 재정위기국 중 가장 모범적인 구조 조정의 예로 평가함.
- o Fitch는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함(2012.11.13).

2. 아일랜드 경제의 개선요인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일랜드 정부의 조치는 ① 재정건전성의 강화, ② 민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③ 산업경쟁력 강화의 세 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아일랜드의 경제위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을 통해 민간채무를 정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은행위기(Banking Crisis)가 재정위기(Sovereign Crisis)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임.
- o 2007년 미국발(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되었고, 그로 인해 민간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음에 따라 이들 은행에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 o 그 결과 2007년까지 흑자를 유지해오던 아일랜드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유로존 최저수준이던 국가채무(GDP 대비)도 급증함.
- ※ 아일랜드의 국가채무(GDP 대비 %, 연도): 25.0('07) → 44.5('08) → 64.9('09) → 92.2('10) → 106.4('11) → 117.6('12)
- 한편 임금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와 EU의 동유럽 확대에 따른 투자유입 감소는 외자유치 · 수출중심으로 대표되는 '켈틱 타이거 모델'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였음.
-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외국자본의 철수가 가속화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기본방향은 2010년 11월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음.

1) 재정건전성 강화

- 아일랜드 정부는 2010년 11월 EU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부터 일련의 긴축정책을 펼쳐왔음.
-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공공부채(Public Deb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2008년부터 긴축정책을 취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아일랜드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7%를 상회하는 등 재정압박이 심화되자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그 전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인 긴축정책을 발표함.
-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비중을 GDP 대비 3%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음.
- o 2008~13년 동안의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GDP의 약 18%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긴축정책을 펼쳐왔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음.
- o 2015년까지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을 위해 총 340억 유로의 긴축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GDP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85%가 집행된 상태임.
- o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재정긴축의 1/3은 정부세수 확보를 통해(revenue side), 그리고 2/3는 정부지출 부문(spending side)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표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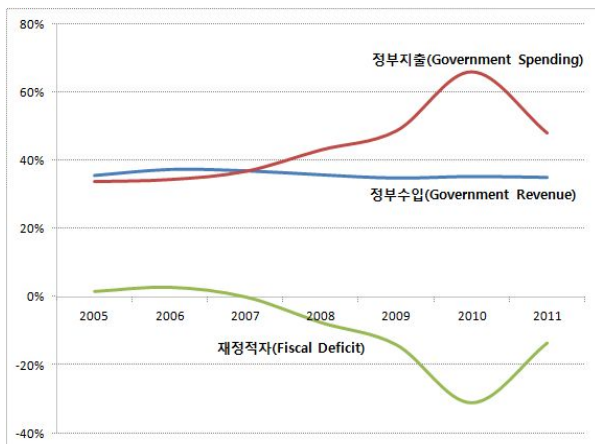
표 2.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긴축정책

구분	세부사항
정부세수 확보 (Revenue Side)	□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구간별 소득세율 인상(2011년) □ 담배, 주류, 자동차 디젤유 등에 대한 소비세 인상(2011~13년) □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2%씩 인상하여 품목에 따라 최대 23%까지 인상(2012년) □ 탄소 배출량으로 구분된 12개 차량 등급 중 상위 11개 구간에 대해 탄소세 인상(2013년) □ 자본취득세(Capital Gains Tax) 세율을 30%에서 33%로 인상(2013년) □ 재산세 신설(2013년)
정부지출 축소 (Spending Side)	□ 2010년 Croke Park Agreement라고도 일컬어지는 Public Service Agreement를 통해 공공부문 지출 감축안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시행 :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2009~10년: 14%, 2010~11년: 8%) : 고용유예(Hiring Moratorium)는 물론 지속적 명예퇴직도 병행 : 공공부문 연금수령액의 4% 삭감(2011년) □ 아동수당을 월 140유로에서 130유로로 삭감 계획(2013년) 등 교육서비스 같은 각종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원 축소

자료: Stefan Gerlach, Ireland – from crisis to recovery, BIS, 2013/ Ireland: Selected Issues, IMF, Septemb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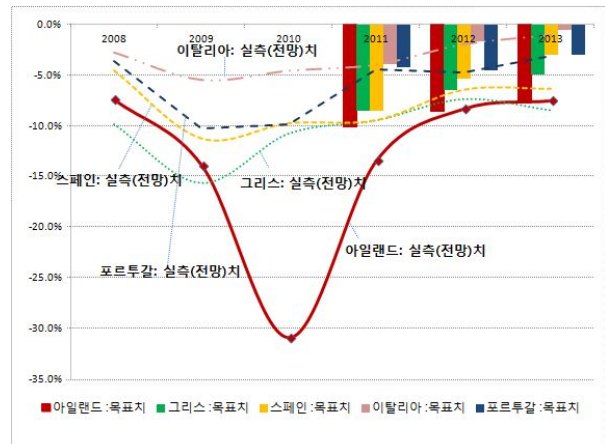
- 아일랜드 정부는 2008~13년 중 6년 연속 긴축재정을 편성한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 수준을 대폭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2012년 목표치(8.6%)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6 및 그림 7 참고).

그림 6. 아일랜드 정부의 GDP 대비
수입지출 및 재정적자 추이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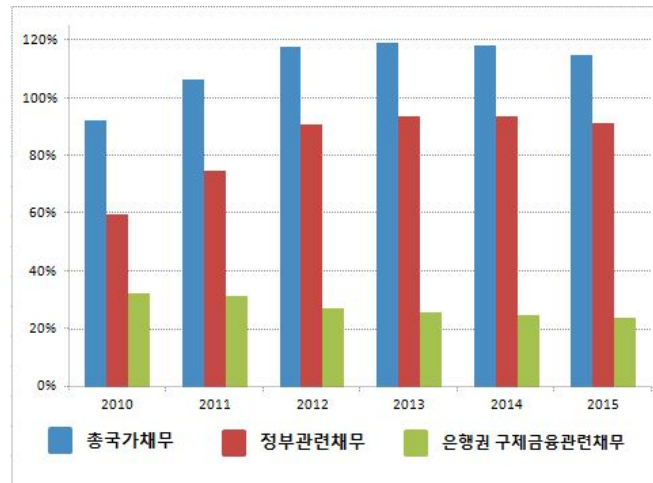
그림 7. PIIGS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주: PIIGS 국가는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Spain을 의미함.
2012년과 2013년 자료는 각각 잠정치 및 예측치를 나타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국가채무 수준(GDP 대비)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순수 국가부채(National debt)의 경우 GDP 대비 9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그림 8 참고).

그림 8. 아일랜드의 정부의 GDP 대비 국가채무 추이



주: '총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Debt)'는 '정부관련채무(Sovereign Related Debt)'와 '은행권구제금융관련채무(Banking Related Debt)'를 합한 것으로, ECB나 IMF 등에서는 '총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Debt)'를 국가채무로 산정하고 있음. 참고로 본고에서 언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순수) 국가부채(National debt)는 '정부관련채무'를 의미함. 2012년부터는 예측치이며 그 이전은 실적치임.

자료: 아일랜드 중앙통계국(Ireland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Department of Finance.

2) 민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 아일랜드 정부는 2009년 12월 이전까지는 민간은행의 부실 부동산 담보채권 처리를 위해서 직접 개별 민간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함.

- 2009년 6월까지 3개 대형은행에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하였고, 특히 Anglo-Irish Bank에 대해서 2009년 말까지 40억 유로를 투입하였으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됨.

■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은행권 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재정위기 리스크가 증폭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2009년 12월 NAMA(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라는 Bad Bank를 설립함.

- EU법은 개별 회원국이 EU 내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도 금지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부실자산구제에 관련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회원국이 관련 기구나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¹⁾
 - EU 집행위원회는 NAMA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여 2010년 2월 26일 설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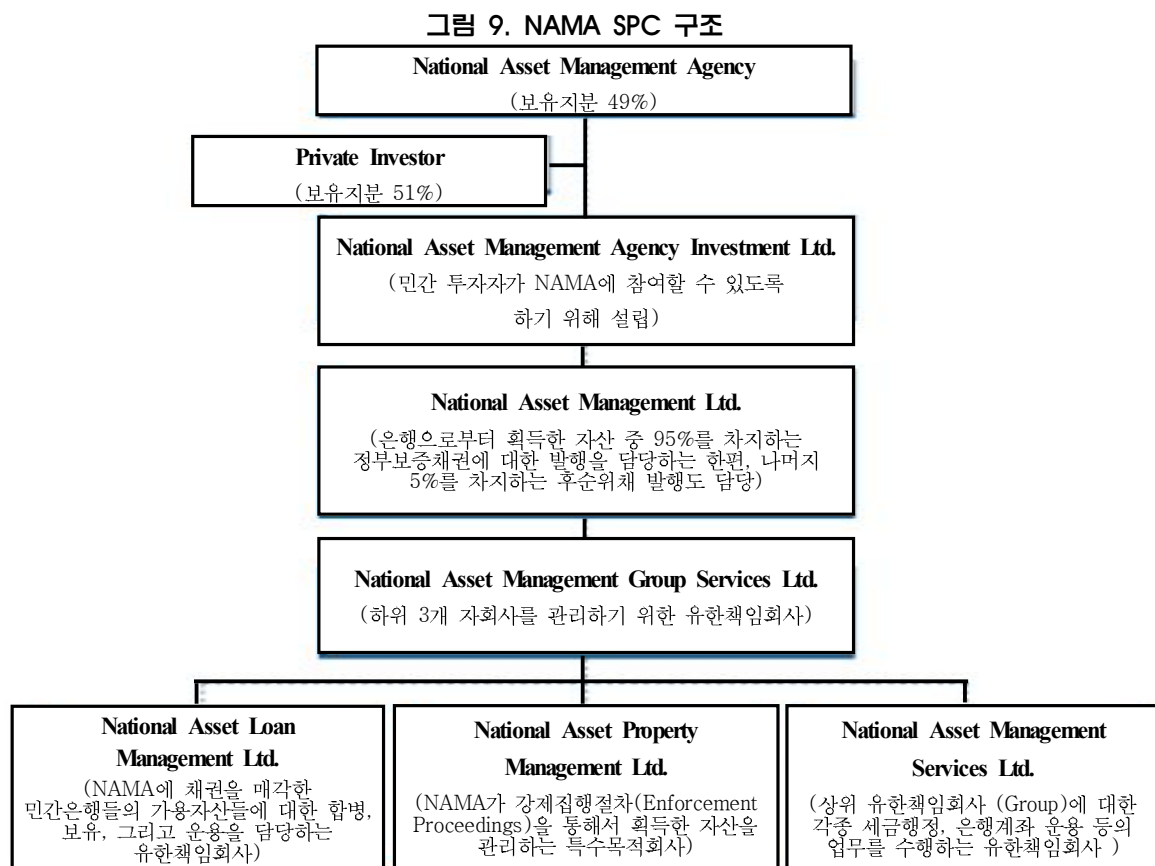
■ NAMA는 민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본 채권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함.

- NAMA는 설립 당시 5개 민간 금융기관들²⁾로부터 부실 부동산담보채권을 총 730억 유로에 매입하였

1) EU 집행위원회는 경쟁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State Aid Rules'이라는 일련의 원칙을 정하여 회원국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함. EU 집행위원회는 NAMA를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공적기구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임.

2) Allied Irish Banks(AIB), Anglo-Irish Bank(Anglo), Bank of Ireland(BOI), EBS(Educational Building Society), Irish Nationwide Building Society(INBS).

- 고, SPC를 통해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임대수익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함.
- NAMA의 부실채권 매입금액인 730억 유로는 액면가의 평균 53% 수준으로 각 은행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투입이 필요했음.
 - 이에 2010년 Anglo-Irish Bank 구제를 위해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했던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짐.³⁾
- NAMA가 설립한 SPC는 NAMA가 49%의 지분을 가지며 민간이 나머지 51%의 지분을 갖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산하에 다시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수자산의 특성에 따라 매입매각 작업 및 운용 등을 나누어서 진행함(그림 9 참고).



자료: 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NAMA).

3) 2011년 말 기준 총 740억 유로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각 금융기관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십억 유로, %)

	AIB	Anglo	BOI	EBS	INBS	Total
매입채권규모(Loan Balances Transferred)	20.4	34.1	9.9	0.9	8.7	74
지불금액규모(Consideration Paid)	9.0	13.4	5.6	0.4	3.4	31.8
평균 할인율(Discount)	56	61	43	57	61	57

주: 채권만기 등에 따른 이자율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매입채권규모 대비 지불금액규모가 평균할인율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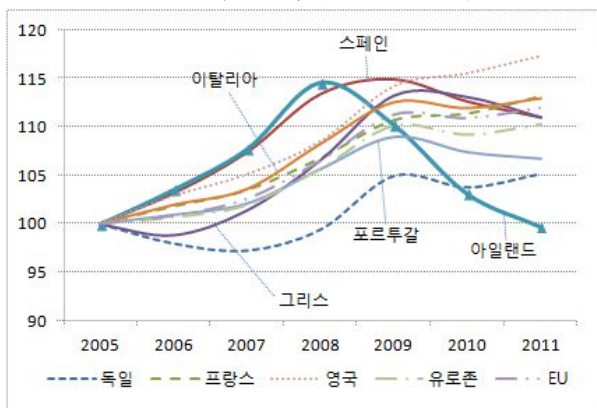
자료: NAMA

- 부동산 시장침체의 장기화로 매입한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NAMA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함.
- 대표적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201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80/20 후지급결제프로그램(80/20 Deferred Payment Initiative)을 들 수 있음.
 - NAMA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주택 판매 희망자는 (NAMA가 산정한) 주택 평가가격의 80%의 금액을 NAMA 지정 은행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이 80%의 금액은 주택 구매 희망자의 Deposit 10%와 모기지 대출을 통한 70%로 구성됨.
 - 5년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을 재산정하여, 최초 가격의 0~20%에 해당하는 모기지 대출을 주택 구매자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됨.
- ※ 주택가격이 불변이거나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20%를,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0%를 제공
-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나 부실 부동산담보채권의 처리와 공적자금 회수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시도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산업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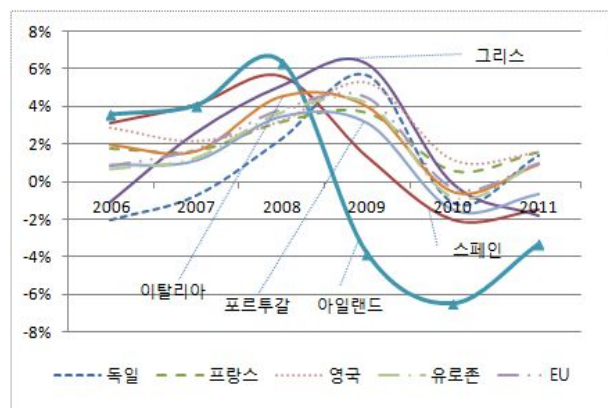
- 아일랜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여 2008년에는 유럽 주요국 중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통해 2011년에는 (유럽 주요국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함 (그림 10 및 그림 11 참고).

그림 10. 유럽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추이 (Index) (2005년=100)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그림 11. 유럽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임.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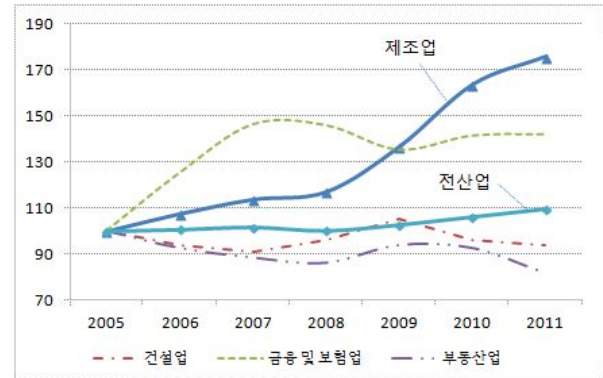
- 낮아진 노동비용 등은 12.5%라는 낮은 수준의 법인세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외국계 기업의 투자확대와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불러옴.
- 노동비용 감소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표 3 참고), 특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음(그림 12 참고).

표 3. 아일랜드의 공공 및 민간영역의
주간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2009 Q4		2010 Q4		2011 Q4	
	평균 임금 (유로)	근로 시간 (시간)	평균 임금 (유로)	근로 시간 (시간)	평균 임금 (유로)	근로 시간 (시간)
공공부문 (Public Sector)	965.8	32.3	917.1	31.9	917.7	3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0.6	0.9	-5.7	-1.2	0.1	-0.3
민간부문(Pri- vate Sector)	631.3	32.0	629.1	31.9	622.0	31.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	-2.4	-0.5	-0.6	-1.1	-0.6

자료: 아일랜드 중앙통계국(Ireland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그림 12. 아일랜드의 산업부문별 노동생산성 추이
(Index) (2005년=100)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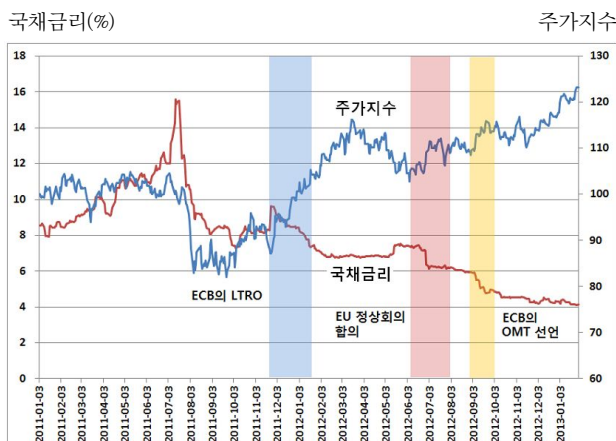
- 아일랜드 투자청(2012년 가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2012년 가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4만 6,000개의 직접고용(Direct employment)을 창출하였으며, 1만 3,000개의 FDI 관련 일자리(FDI jobs) 또한 창출되었음.
- o 이 수치는 10년래 최고 수준으로 아일랜드 경제회복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 신호로 이해할 수 있음.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당분간 아일랜드 경제는 긴축과 높은 실업률에 따른 내수침체 속에 수출증가가 경기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아일랜드 정부는 2013년에도 35억 유로(GDP 대비 3%)의 재정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고실업 속에 내수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o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가장 원활하게 추진해 온 국가로 언급되는데, 이는 내수규모가 작고 해외수요 의존도가 높아 긴축으로 인한 경기하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 o 그러나 고실업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긴축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임.
- 단위노동비용 감소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강화, 유로화의 전반적인 약세, 최근의 외자유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외수출 부문이 아일랜드의 경기를 견인할 전망이다.
 - o 2008~09년의 경제위기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은 외자유치, 수출주도 성장을 이룬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원에 있으며 대외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o 향후 건설부문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을 수출산업으로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업률 감소와 내수회복의 관건이 될 것임.
- 최근 아일랜드 정부의 연이은 국채발행 성공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기침체, 부실은행 문제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함.

- 아일랜드 정부는 2012년 7월 구제금융 이후 최초로 국채발행(5년 및 8년 물, 52억 유로)에 성공한 이후 올해 1월 8일에도 25억 유로(2013년 수요의 25%)의 국채발행에 성공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시작함.
 - 국채발행의 성공으로 2013년 말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짐.⁴⁾
- 아일랜드 국채금리의 하향안정화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조치와 아일랜드 경제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함.
 - 2012년 하반기 중 유로존의 지원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대형 회원국의 부실은행 지원과 국채안정에 초점을 둔 바, 부실채권 정리작업이 진행 중인 아일랜드의 금융안정에도 기여하였음.
 - ※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의 은행 직접구제 허용, ECB의 선순위채권자 지위포기(6월 28~29일 EU 정상회의),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선언(9월 6일 ECB 정책이사회), 그리스 재협상 타결(11월), 단일은행감독기구 출범계획 합의(12월 12일)
- 그러나 향후 ESM의 부실은행 지원방안에 따라 재정위기와 은행위기를 분리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아일랜드 정부의 방침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2012년 12월 ESM은 스페인 민간은행에 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직접 지원한 바 있는데, 아일랜드 또한 정부를 거치지 않은 직접 지원방식의 추가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⁵⁾ EU는 ESM의 지원을 위해 ① 구제금융에 상응하는 해당국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거나, ② ESM이 지원한 민간은행이 파산할 경우 해당국 정부의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 EU와 IMF의 구제금융은 2013년 11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의 구제금융은 ESM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
- 또한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debt)에서 은행부문 구제금융을 제외한 순수 국가부채(National debt)는 2015년까지 GDP 대비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 직전인 2007년의 19.9% 수준으로 낮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함.
- 그 밖에도 실업률이 하향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를 웃돌고 있다는 점, 수년째 지속되는 긴축정책으로 아일랜드 국민들의 피로도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등은 아일랜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13. 아일랜드의 국채금리 및 주가변화



주: 국채금리는 8년 만기물, 주가지수는 2011년 1월 3일의 주가를 100으로 하여 계산.

자료: Bloomberg.

표 4. 아일랜드 경제의 리스크 요인

구분	세부사항
긍정적 신호	▣ 재정적자폭 축소 ▣ 경상 및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 외국인투자 및 그에 따른 고용증가 ▣ 최근 주택가격의 안정화
잠재 리스크	▣ 높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 ESM을 통한 은행권 구제금융 직접지원 불투명 ▣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 ▣ 높은 실업률 및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 고조

4) Dawn in the west, The Economist, Jan 5th 2013.

5) EU redrafts plan for bank rescue funding plans, The Financial Times, Jan 14th 2013.

- 재정위기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대응은 여타 남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임.
- 2008~09년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아일랜드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한 재정확대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재정안정화와 임금감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 아일랜드 경제개혁의 초점은 ① 국가재정의 건전화, ② 금융산업의 정상화, ③ 임금 및 여타의 생산비용의 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회복이 위기탈출의 주요 전략이었음.
 - EU-IMF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외자유치의 상징인 낮은 법인세(12.5%)를 고수하고, 오히려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것은 경제회복의 관건이 '외자를 통한 투자확대→수출증대'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됨.
- 사회 저변에 긴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도 여타 재정위기국과 차별되는 점임.
 - 과거에 존재했던 노사정 협의의 경험은 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아일랜드는 2012년 6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신재정협약의 채택을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으나 60.3%의 찬성으로 받아들인 바 있음.
- 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은 경기부양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기의 원인 자체가 여타 남유럽 국가들과 다름.